

2017 국가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17.4.8 시행)

이번 국가직 9급은 행정학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참신하고 지엽적인 문제들도 일부 출제되었으나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기본이론을 충실히 이해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고득점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번 국가9급 행정학의 출제상 특징은 문5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문8의 정부조직에 관한 문제, 문19의 공공기관유형 사례문제에서 보듯이 이론과 실제 행정기관을 연계시켜 묻는 문제가 3문항이나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직 체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법령이나 이론에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답을 찾기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부 문제들 때문에 체감난이도는 작년 국가9급 행정학보다 한두 문제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김포시, 도로교통공단, 관세청, 금융감독원, 특허청, 한국방송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소비자원 등 구체적인 공공기관들의 성격과 지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가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기출문제 암기식 공부의 한계를 노정시켜준 출제로 앞으로는 정부조직과 공공기관들의 구체적인 지위와 성격까지 이해하는 공부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문11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관한 문제가 지난 사회복지직에 이어 또 다시 출제되었는데 이번 문제는 문맥상 정답을 찾는 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앞으로 김영란법은 워낙 중대한 법이니만큼 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나 적용대상자들을 잘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의 문제는 대부분 교과서적인 이론을 묻거나 기출문제가 변형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제 지방직 시험에 대비하여할 때입니다. 공부방식에 너무 큰 변화를 줄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요점위주보다는 기본서를 심화수업 때 언급한 내용 중심으로 차분하게 한번 정독하거나 이론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이론강의를 빠르게 한번 수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 중 규 -

0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업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②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 ③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④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답] ① 대표관료제는 임용할당제로써 실적에만 의존하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 대표관료제의 특징과 한계

- 실적제와의 상충
- 행정의 전문성·생산성 저해
- 재사회화(공직입문 후 신념 변화) 불고려
- 역차별 우려 : 기회의 공평 저해
- 외부통제 무력화 : 국민참여나 협력적 통치(거버넌스) 등 저해 ⇒ 국민주권원리에 반함
- 경험적 입증 부족 : 능동적 대표
- 구성론적 대표의 기술적 한계
- 특정집단에의 악용 : 집단이기주의
- 정부규모 팽창 소지 ⇒ 감축관리·NPM 등 생산성·효율성이 강조되는 행정과 충돌

☞ 2017 9급 선행정학 p.367

02.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효율성 강조
- ㄴ.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 ㄷ.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
- ㄹ. 고객중심의 행정
- ㅁ. 기업식 정부 운영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ㄹ, ㅁ

[답] ③ 신행정학은 1960년대 말 미국 사회의 격동기 시기에 빈곤, 차별, 소외, 폭동 등 절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으로 논리실증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행태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신행정학은 적실성(relevance)과 실천성(action)을 지향하며 가치주의와 정책지향주의를 제창하였다.

- ㄱ [X]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과 정의를 중시한다.
- ㄴ [X] 실증주의 대신 현상학적 연구를 지향한다.
- ㄷ [O] 적실과 실천성을 강조한다.
- ㄹ [O] 신행정학도 소외계층 등 고객 중심의 행정을 강조한다.
- ㅁ [X] 기업식 정부는 신행정론 이후인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된 시장지향적 정부운영을 말한다.

● 신행정론의 주요 특징

- 사회적 형평 등 행정의 새로운 가치 중시 : 가치주의, 인본주의 행정학
- 격동예의 대응과 행정의 독립변수적 역할 및 적극적 가치관 중시 : '관조'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자로서의 '실천'하는 적극적 행정인 중시, 적실(relevance)과 실천(action) 강조
- 정책 및 문제지향성 : 정치행정신일원론
- 행태론의 지양과 현상학적 접근법 추구 : 간주관성 및 능동적, 사회적 자아 중시
- 과학적 방법을 포기(배격)한 것은 아님 : 과학적 지식을 문제해결에 활용할 것을 주장
- 사회적 적실성·기술성(치방성)·대응성 강조
- 후기관료제모형 : 계층제의 타파로 민주적·동태적·도덕적·분권적·다원적 조직 주장
- 고객지향적 행정과 민주적 행정 모형 강조 : 수익자의 참여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0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 ②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 ③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 ④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저해한다.

[답] ④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법규와 절차에 의한 행정을 강조함으로써 감정 및 편견 없이 보편타당한 행정을 지향하는 비정의성(impersonalism)을 지향한다.

●관료제의 병리

- 민주성·대표성 제약
- 동조과잉 : 규칙이나 법규에의 집착으로 목표와 수단의 전도(목표의 전환)
- 번문욕례 : 문서와 형식의 집착
- 인격 상실 : 물인간적 초연성
- 전문가적 무능
- 할거주의 : 기능별 편제로 자기가 속한 집단에의 집착과 편협한 안목
- 변동에 대한 저항
- 독선주의, 기밀주의 : 밀실행정과 무책임성
- 피터의 원리 : 무능력수준까지 승진
- 관료제국주의 : 관료들의 권한행사영역이 계속 확장 (Parkinson)

04.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 ②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 ③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④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답] ③ 계급제는 직업공무원제, 폐쇄형, 일반행정가주의(generalism)과 연관되며 전문성을 저해한다. 폐쇄형이므로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할 수 없고 직무의 성질별로 업무가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상 횡적이동이 활발하여 전문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 ☑ ① [O] 계급제는 폐쇄형이므로 공무원의 신분 안정과 직업공무원제에 기여한다.
- ② [O] 계급제는 엄격한 분류 구조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 ④ [O] 계급제는 직무보다는 조직 중심의 분류제도이므로 조직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하다.

●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구분	직위분류제	계급제
분류기준	직무의 종류·책임도·곤란도(종직+횡직분류)	개개인의 자격·능력·신분(횡직분류)
발달배경	산업사회	농업사회
채용국가	미국·캐나다·필리핀	영국·독일·일본
인간과 직무	직무중심	인간중심, 조직중심
시험·채용	합리성, 공정성(정원관리·사무관리 용이)	비합리성(업무분담의 비합리화)
일반·전문행정가	전문행정가 양성	일반행정가 양성
보수정책	직무급(동일직무 동일보수의 합리적 보수제도, 보수의 형평화)	자격급·생활급(생계유지수준을 지급하는 비합리적 보수제도)
인사배치	비신축성(횡적교류 곤란)	신축성(횡적이동 용이)
행정계획	단기계획·단기능력·단기안목	장기계획·장기능력·장기안목
교육훈련	전문지식 강조(교육훈련 수요 파악 용이)	일반지식·교양강조
조정·협조·교류	곤란(할거주의 초래 우려)	원활
개방·폐쇄	개방형(외부채용형)	폐쇄형(내부충원형)
신분보장	약함(민주통제 용이)	강함(민주통제 곤란)
직업공무원제	확립 곤란	확립 용이
조직구조와의 관계	연계성 높음	연계성 부족
인사의 융통성	낮음	높음(인사권자의 리더십 강화)
공직의 경직성	낮음	높음
몰입	직무몰입	조직몰입
창의력 개발 및 능력발전	불리	유리
도입요건	대규모 복잡한 조직	소규모 단순한 조직
적용계층	하위계층	상위계층

0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 ②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답] ③ 합동평가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위임사무에 대한 평가로서 행정자치부장관과 사무를 위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합동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①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각각 소속 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 ☑ ① [O] 김포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교통공단과 같은 공공기관도 정부업무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② [O] 관세청장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므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O]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이 되고,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중앙행정기관 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재평가(총리)
지방자치단체 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평가지원(행자부장관), 합동평가(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행자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실시)
특정평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 평가(국무총리)
공공기관 평가	외부평가(자체평가 불인정)

☞ 2017 9급 선행정학 p.234

06.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연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② 정책결과와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답] ③ 상향식 정책집행은 집행현장 상황에 따라 정책목표와 전략을 유연하게 수정하는 접근법으로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 ☑ ① [X] 사바티어의 정책지연연합모형은 대표적인 통합형 모형이다. 사바티어는 처음에 하향식을 주장하다가 통합형인 정책지연연합모형을 주장하였다.
②④ [X] 하향식 집행의 특징이다.

● 하향식 집행과 상향식 집행

유형 구분	하향적·집권적 집행 (top-down)	상향적·분권적 집행 (bottom-up)
정책상황	안정적·구조화된 상황	유동적·동태화된 상황
정책목표 수정	목표가 명확하여 수정 필요성 적음	수정 필요성 높음
결과와 집행	정책결과와 집행의 분리 (이원론)	정책결과와 집행의 통합 (일원론)
관리자의 참여	참여 제한, 충실한 집행이 중요시됨	참여 필요
집행자의 재량	집행자의 재량 불인정	집행관료의 재량권 인정
정책평가의	집행의 충실성과 성과	환경에의 적응성 중시,

기준		정책성과는 2차적 기준
집행의 성공요건	결정자의 리더십	집행관료의 재량권
핵심적 범률 (법제화)	있음	없음
Berman	정형적(거시적·하향적) 집행	적응적(미시적·상향적) 집행
Elmore	전향적 집행	후향적 집행
Nakamura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가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방향과 흐름	집권적, 기계적, 단계적 연역적, 규범적	분권적, 역동적, 귀납적, 실증적

☞ 2017 9급 선행정학 p.213

07.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 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과 유사하다.
②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③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내용 이론으로 분류된다.
④ 작업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답] ① 허즈버그의 욕구충족 2개요인 이론은 불만을 주는 요인인 위생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인 동기요인이 서로 별개임을 강조하는 이론이지 두 요인 간의 계층화를 강조하지는 않았다는 점과 충족되지 않은 모든 욕구가 동기부여의 힘을 가지지 않는다고 본 점에서 A.Maslow의 이론과는 다르다.

☞ 2017 9급 선행정학 p.262

08.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답] ④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중앙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책임운영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책임운영기관과 소속기관 형태인 책임운영기관이 있는데 특허청은 유일한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책임운영기관이다.

- ☑ ① [X]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헌법상 기구이다. 다만, 감사위원

회의는 감사의결기관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X]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며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설립).
- ③ [X]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행정부 공무원의 소청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2017 9급 선행정학 p.318

09.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답] ③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의 합이 아니라 별도의 실체로써 존재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개인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① [X] 과정설의 특징이다.
- ② [X] 실체설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이다.
- ④ [X] 실체설의 특징이다.

● 실체설

·공익은 사익과 구별(대립)
·공익과 사익 간에 궁극적인 갈등은 없음
·투입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개도국의 입장
·국민의사 외면
·비민주적 공익관

☞ 2017 9급 선행정학 p.68

10.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기적이며 목표·성과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 ②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③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 ④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답] ②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구성원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산으로 여기며 개인의 욕구와 조직목표 간의 조화,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인사관리를 의미한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서는 인적자원관리와 성과를 연계시키며 중

양인사기관은 인사정책에 관한 전략적 기능만 담당하고 구체적인 인사업무는 각 부처에 분권화시킨다.

● 전통적 인사관리와 인적자원관리

구분	전통적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
구성원에 대한 인식	비용(cost), 통제대상	자원(resources), 자산
이론적 배경	과학적관리론	후기인간관계론
주된 관심	조직의 성과 (생산성) 향상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행복 조화(근무생활의 질 중시)
주요 특징	·하향적·집권적관리 ·규칙과 절차 중시 ·경직적 ·X이론과 통제	·상향적·분권적 관리 ·성과와 책임 중시 ·신축성과 융통성 ·Y이론과 참여
관리 전략	교환형 관리	통합형 관리

☞ 2017 9급 선행정학 p.374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③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④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답]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언론 기고문 등)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며 ①③④는 모두 부정한 청탁행위에 해당한다.

● 금지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

부정청탁	
금지대상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의 지부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

	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결과를 조작 또는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예외 (허용 행위)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등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 또는 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확인·문의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금품 수수	
금지 대상 행위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행위
예외 (허용 행위)	1.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장관급은 5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 이하 등 직급별로 상한액 차등화) 2.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3.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범위 안의 금품 등 4. 사적 거래(중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5.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상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7.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8.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주점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2017 9급 선행정학 p.436

1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 ② 무의사결정은 중립적인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 ③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④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답] ④ 무의사결정이란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의 이익에 도전하는 이슈나 요구를 정책문제화 하지 않고 이를 억압하는 것으로 지배적인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현상이다. 따라서 무의사결정이론은 신엘리트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 ① [X] 지배계층의 이해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이슈는 기각 또는 방치시키려고 한다.
② [X] 무의사결정은 엘리트가 중립적 입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각·방치행위를 하는 것으로 다원주의가 아니라 신엘리트이론의 관점이다.
③ [X] 무의사결정은 좁은 의미로는 주로 의제설정과정에서 나타나지만 넓게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 2017 9급 선행정학 p.163

1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증모형-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 ② 최적모형-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혼합주사모형-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 ④ 쓰레기통모형-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답] ② 최적모형은 Y.Dror가 주장한 모형으로 정책결정자의 직관적인 판단이나 초합리성 등을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한다.

- ① [O] 점증모형은 현재의 정책보다 약간 향상된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정책의 점진적 개선, 한계적 변화를 추구한다.
③ [O] 혼합주사모형은 근본적 결정에 대해서는 합리모형을 적용하되 모든 대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세부적 결정에 대해서는 점증모형을 적용하되 한정된 대안을 면밀하게 살피는 절충적 모형이다.
④ [O]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혼란상태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4가지 요소(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가 서로 만났을 때 여기에 집화 계기가 작용하여 우연히 정책이 결정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 2017 9급 선행정학 p.202

14.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간 퇴직 전 (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 ㉡
 ① 3년 5년
 ② 5년 3년
 ③ 2년 3년
 ④ 2년 5년

[답] ①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취업제한 의무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하는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공직자 취업제한 의무

대상자	퇴직 전	퇴직 후	대상기관	근거법률
재산등록자	5년 이내	3년간	사기업체	공직윤리법
비위면직자	5년 이내	5년간	공사기업	부패방지법

☞ 2017 9급 선행정학 p.435

15.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슈크(Sc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 ②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 ③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답] ② ②는 반대이다. 계획예산제도(PPBS)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조건을 먼저 고려하는 단기적인 예산제도이다.

- ☑ ① [O] 슈크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과 기능을 제시하였다(1962).
- ③ [O] 우리나라의 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에는 재정사업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등이 있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란 각 중앙관서장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전체 사업의 1/3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④ [O]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 즉 조세감면에 의한 간접적 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심의를 받고 이를 공표하는 제도이다.

☞ 2017 9급 선행정학 p.491

16.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④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답]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 2017 9급 선행정학 p.581

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 ②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 ③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 ④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답] ③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에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와 군·자치구 등 지방자치법상의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 ☑ ① [O]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유일하게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 ② [O] 자치계층은 자치를 위한 계층으로 정치적 민주성을, 행정계층(읍,면,동)은 행정을 위한 계층으로 행정적 효율성을 가치로 추구한다.
- ④ [O] 광역시 안에도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다. 실제 인천·울산·부산광역시 안에 군이 존재한다.

● 지방자치법 3조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 2017 9급 선행정학 p.596

18.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도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답] ① 정부실패 요인 중 x의 비효율이란 정부업무가 경쟁상태에 노출되지 않은 독점적 성격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도한 비용발생과 비효율을 의미한다.

- ☑ ② [O] Tullock의 지대추구론은 규제 등으로 발생하는 독점적·반사적 이득을 지대(rent)로 규정하고 기업들이 이 지대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부에 로비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대추구활동이라고 한다. 지대추구론은 독점이 조래하는 사회적 손실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 ③ [O] 거래비용에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 거래조건 합의사항 작성비용 등 사전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 분쟁조정비용 등 사후비용이 포함된다.
- ④ [O] 대리인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무능력자나 부적격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역선택과 선임된 대리인이 주인을 속이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 등의 대리손실(agency loss)이 발생하는 현상에 주목한다.

☞ 2017 9급 선행정학 p.514

19.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방송공사
- ② 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연구재단
-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소비자원

[답] ④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설립된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 ☑ ① [X] 한국방송공사(KBS)는 이론상,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에 해당하지만 실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또는 기획재정부 고시상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한국방송공사는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법 적용을 배제시킨 것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도 마찬가지이다.
- ② [X] 한국마사회는 시장형 공기업이 아니라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 ③ [X] 한국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 공공기관의 구분(2017 기준)

공기업	시장형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공항공사(인천국제, 한국), 부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부발전(주) 등 5개 발전회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총 14개)
	준시장형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위탁집행형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공단 등
기타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발전재단 등

☞ 2017 9급 선행정학 p.322

20.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 ②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③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로도도한다.
-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제도이다.

[답]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과정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는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년 5회계연도 이상에 해당하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이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재정을 사전에 통제하는 사전적 예산제도이다.

● 지방재정법 제33조 우리나라 재정통제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지방재정통제제도

통제 제도	권력성	사전성	주체
① 예산편성지침시달제	권력적 통제1)	사전 통제	행정 통제
② 지방채발행승인제도			
③ 재정투자심사제도	비권력적 통제	사후 통제	
④ 중기지방재정계획			
⑤ 지방재정진단제도			

1) 권력적 통제이면서 사전적 통제에 해당하는 ①②는 2007년 폐지되었다.

☞ 2017 9급 선행정학 p.586